

④ 지역별 유치계획

# 침체된 지역경기 살리기 위해 대전 · 충남 등 유치 경쟁

글 | 유용하 \_ 매일경제신문 기자 jlyon@mk.co.kr

세계 정상급의 과학이 연구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지식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국제 네트워크를 갖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 발표가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정부는 용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2015년까지 3조5천47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과정에 있어 오는 4월 관련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제는 입지선정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3~4월경이면 대략적으로 입지선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공청회도 벌써 3차례나 열렸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설립될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의 신규명칭도 공고하는 등 설립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 대덕 중심론 vs 대덕 탈피론 격돌

사실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과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잇는 '과학도시 트라이앵글' 지역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충청권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할 때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행정과 과학, 교통, 물류의 중추

도시이기 때문에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잠재적 경쟁력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기능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그 해법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이다.

이는 대덕, 오송, 오창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고 역량을 갖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행정도시와 정부 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청주공항, 당진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계획과 연계돼 충청권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충청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지역민은 물론 정부출연연구원 관계자들이 환영일색이었던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10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이 개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한국과학기술의 미래'라는 포럼에서도 충청권 유치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유장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은 "출연연이 담당해온 기초연구들과는 별도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기초과학연구원을 따로 설립하게 되면 상당수 연구자를 출연연에서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연연이 모여 있는 대덕과의 연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대덕은 국내 과학기술 인력의 10%, 장비의 20%, 연구개발(R&D) 예산의 3분의 1이 투입된 곳이니만큼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대덕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활동을 가장 활발히 펼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전경

그러나 대선 공약 때와는 달리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는 과학 연구 성과물이 상품화·산업화로 신속하게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과학비즈니스 혁명의 산실이라는 건립 취지에 따라 대덕이 아닌 다른 곳에 조성돼야 한다는 '대덕 탈피론'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대덕 탈피론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의 발언들 때문에 더욱 힘이 실렸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지는 것이 아니라 허브가 된 중심도시가 주변의 여러 기능도시를 아우르는 광역 모델”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울산과 포항지역 연구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산학 협력, 즉 비즈니스가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며 가장 먼저 탈대덕론을 들고 나섰

다. 이들은 울산과 포항에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한국기업들이 몰려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뒷받침된 산업고도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중이온 가속기 설치 입지가 관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에 있어서 핵심은 벨트 내에 들어설 대형연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와 방사광가속기 건설 논란과 기초과학연구원 설치 적정성 여부,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조화 문제 등이었다. 특히 지역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문제는 대형연구시설이 어떤 것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방사광가속기와 중이온가속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들어설 대규모연구 시설로 지역유치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사진은 포항방사광가속기 전경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중이온 가속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후보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에 나섰던 포항은 포항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중복투자라는 점에서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가장 희색이 만연한 것은 충청지역이다. 충청북도는 오창지역 지하 10m 아래 330만5천800㎡ 지역이 화강암으로 구성돼 거대 연구시설이 들어서도 지반침하현상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질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충북도는 기관장까지 나서서 학계 차원에서 오창 건립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키고, 유치논리 개발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국 각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충북은 소외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참여함으로써 강원측까지 뺄 수 있는 개발기회를 확충한다는 방안까지 세우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설 거대연구시설로 중이온 가속기가 결정됨에 따라 입지선정에 있어서 유리해졌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충청민에게 제시됐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정할 명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충청남도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덕에 설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초과학연구소를 유치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소 유치와 관련해 충남도는 공주와 금남지역 등을 살펴보고 예상 부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덕특구와 오

송, 오창지역은 물론 충남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천안과 아산지역의 반도체, LCD 산업의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다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도 지난 2월 1일 뒤늦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뛰어 들었다. 인천시는 정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4억 원의 기본 용역사업비를 책정하고 유치활동에 뛰어 들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당초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충청권 입지에 대한 내용이 최근 입법예고된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 신항을 주축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기반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청라와 송도, 영종을 잇는 국제비즈니스 거점단지 조성안을 구축해 이를 서해안신산업벨트 및 남북교류접경벨트와 접목해 공간 조성에 대한 복안도 사실상 마련한 상태다. 특히 경기와 전라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연계해 추진될 예정인 초광역개발권과도 연계, 인천경제자유구역-평택항-새만금을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다른 시도와도 협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충청권과 대구, 경북 등이 이미 준비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경기도와 전북 새만금 등과 연계한다면 인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안 여건은 가장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이 밖의 도시들은 일단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에서 한 발 물러나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충청지역 이외에 가장 활발하게 연계움직임을 보였던 곳은 부산광역시다. 부산시는 지자체 활성화와 사업을 위해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이를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역에는 고리원자로가 갖춰져 있고, 원자력의학원과 같은 방사선 관련 의학·과학기술 연구시설이 많다는 것과 3~4개의 국공립 연구기관이 해양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조선 등 국가 핵심산업이 모여 있는 포항과 울산 등 동남권을 연계하면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같은 여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국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충청권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경북 구미의 경우는 구미 산업 단지를 바탕으로 경북지역 부품소재 산업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들어설 대규모 연구시설로는 결국 중이온가속기로 결정됐다. 사진은 미국 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이온 충돌 가속기(RHIC) 모습



미국 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이온 충돌 가속기 내부 모습

연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연구개발특구 추진에 발맞춰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확한 발전청사진 제시가 중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정확히 돼 있지 않는 상황이고 정부 역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마구잡이로 지정되기만하고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는 '혁신도시'와 같은 꼴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다. 지역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연구에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서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쪽에 연구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대전에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대덕연구단지의 R&D 성과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취지였는데 기초과학을 비즈니스와 융합하겠다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개념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획한 2015년까지 기초과학 육성에 비즈니스 성과도 이루고,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원과 산업단지, 거대연구시설까지 들어설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라며 “연구성과의 비즈니스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구 한국물리학회 회장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모두 외국 시설과 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당초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성해 해외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선정에 있어서 토지비용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차 공청회에서는 단국대 김현수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일종의 신도시 개념이니만큼 시설이전과 건설에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에 관한 논의 때문에 비용조달 문제가 뒤로 밀릴 경우 결국 연구원들의 근무조건이 나빠져 연구에 지장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도시의 개념 자체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지역선정만 남겨두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부의 정확한 발전비전 제시와 추진력이 관건이다. ⑤7



글쓴이는 성균관대 화학과를 졸업 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석사, 과학정책으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1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사회부, 부동산부, 시티라이프 기획팀, 여론독자부 등을 거쳐 과학기술부서에서 취재하고 있다.